

양돈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제 우리의 양돈업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양돈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서 기 원
(농협대학 교수)

1. 머릿말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콘·호그·싸이클(Corn-hog cycle)로 불리는 돼지가격의 변동은 평균 3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였으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주기가 4~5년으로 다소 길어졌다. 즉 79년의 불황을 극복한 양돈업계는 다시 83~84년에 불황을 맞았고, 그후 꾸준히 회복되던 돼지가격은 지난해에 이르러 또다시 최근년에 보기 드문 불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돼지의 마리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주기가 다소 길어진 것은, 역시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돈육의 소비도 착실하게 성장해 온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옛날과는 크게 다르다. 과거의 불황은 그 요인이 주로 국내적 요인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쳐 수급불균형만 해소되면 곧 회복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수급만 조정되면 생산비나 수익성 같은 것은 크게 따져보지 않아도 양돈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비록 그 불황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의 급증에서 결과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수급의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돈업도 이제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특별기획/ 축산물 수입개방에 이렇게 대처하자

어쩔 수 없이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작년 4월에 발표된 농축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에서 생육으로서의 돼지고기 그 자체는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통조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소시지가 풀렸고, 내년에는 다시 돼지고기의 설육(脰肉)이 풀리게 되어 있는 이상, 그로부터 입을 양돈업의 막대한 타격은 불을 보듯 흰한 일이다.

양돈산업이 그 기반을 굳건히 확립해 나가려면, 양돈농가, 가공기업, 양돈관련단체,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양돈구조조정 방향

오늘날의 양돈업계는 한마디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부업양돈농가, 전업양돈농가, 기업적 양돈업체, 대기업양돈 등 다양한 규모의 경영체가 무차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양돈업은, 농가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업적 양돈이나 전업적 양돈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들에만 의존하는 양돈산업은 투자자원의 제한이나 기술개발의 능력면에서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적 양돈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대기업 내지 기업적 양돈업체가 우리나라의 양돈업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업적 양돈이나 전업적 양돈이 핵(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

우 이들을 중심으로 양돈업이 영위되면 과연 돈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양돈구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왕에 제정된 축산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대기업 내지 재벌기업들이 영위하는 양돈규모는 모돈 1,000두 이내로 하루속히 감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돈 100두 이상을 모두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행령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그대로 양돈에 참여한다면 이들의 생산량은 전량 가공용이나 수출에만 돌리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참고로 대만은 모돈 100두 이상의 양돈업체에 대하여는 국내공급을 금지시키고 수출에만 전념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하여 이를 어길때는 중(重)과세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육의 대일수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500두 이상으로 조정했다가 서서히 하향조정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양돈농가, 기업적 양돈, 대기업 양돈, 돈육 가공제품 생산업체간에 합리적인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돈은 부업적 내지 전업적 농가가 주로 담당하고, 기업적 양돈업체는 우량 자돈(仔豚)의 개발, 공급을 담당하며 대기업은 돈육가공분야에 전념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 기능 분담은 다시 양돈과 동 가공업체간의 계열화(系列化)를 필요로 한다. 이는 원료돈육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사육의

확립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가 양돈분야에서 무차별적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경제면에서나 양돈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섯째, 양돈농가의 조직화이다. 양돈농가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히 결속해야 한다. 이는 금융 및 유통지원을 확대시키고,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또 정부로서도 이를 권장해야 한다. 불황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아무리 “모돈을 10% 감축해라”, “사육두수를 줄여라” 해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때, 이를 생산자단체에 위임하면 정부정책의 자율적 수용도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3.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가의 대응 자세

양돈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하려면 경영규모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양돈규모가 모돈 기준 50~100두가 중심이면서도 수출상품으로 잘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돈규모는 반드시 양돈규모가 크다고만 해서 규모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양돈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업적 양돈농가를 어떻게 보호하여 그 소득원을 확보시키느냐, 그러면서도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은 또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의 철저한 자구(自救)노력의 경주라 할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농민들의 자세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양돈농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이는 부업적 양돈농가들인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개별농가가 모두 경쟁상대라고만 생각하는 상황하에서는 비용 절감과 그에 의한 발전이 기약될 수 없다.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이는 사료구입, 시장대응, 기술의 개발과 도입 등의 면에서 공동화가 추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종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분뇨처리의 공동화는 개별농가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둘째, 사료의 자가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단미(單味)사료의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에만 의존하는 제도속에서는 양돈은 물론 축산업 전체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핀란드나 덴마크에서처럼 사료곡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유로이 사료를 구입하여 배합할 수 있고, 또 사료효율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사료의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료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와 같이 90kg의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160~180일이 소요되어서는 안된다. 그 기간에 적어도 110kg에 도달하는 양돈기술이 개발돼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출에 대비한 우수한 등급육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 소형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사료급여, 열관리, 경영관리 등을 해나갈 수 있는 전산(電算)화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모돈이 50두만

되어도 전산을 통한 프로그램의 입력(入力)으로 사료급여가 자동화되고 있으며, 사료가격과 사료 효율을 배합한 사료를 즉석에서 얻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영수지는 언제나 계산해 볼 수 있어 항상 경영 상태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양돈농가가 경영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농민들은 모름지기 경영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4. 정부의 대응자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양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지원을 해나가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축산법을 손질할 때까지만 해도 부업적 내지 전업적 양돈농가 중심으로 양돈산업의 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의 추이를 보면 대기업 내지 재벌기업의 양돈을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였다. 또 대일수출이 서서히 늘어남을 계기로 정부는 양돈산물의 수출증대에 주력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10% 샘플만 검사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대일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검사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돈육수출이 기대한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앞으로 돈육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펴 나가야 한다.

첫째, 양돈의 생산비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그만큼 가격을 낮춤으로써 생산비를 경감시켜야 한다. 그리고

양돈에 필요한 기자재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그에 대한 관세도 전액 면제해야 한다.

둘째, 양돈발전을 위한 연구를 전담할 양돈연구소도 정부차원에서 설립해야 한다. 축산업중 돼지고기만큼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투자로 연구소쯤 하나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소에서는 우량돈의 개발은 물론, 한국양돈의 기본모델의 개발, 지역별 표준 생산비의 예시, 사육두수의 신속·정확한 파악, 해외시장정보의 다각적인 수집 등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양돈농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조금(自助金)제도를 도입코자 함을 계기로, 축산물생산 및 가격안정정책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제살 뜯어 먹기식의 자조금제도는 실효가 없으며, 설혹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해서 그 기금의 80%를 적립하고, 나머지 20% 중 10%는 자조금으로, 마지막 10%는 축산단체에 사업을 부여하고 그 수익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불황이 닥쳤을 때는 자조금의 기여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면 양돈농가는 우선해서 자조금 출연(出捐)에 협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제도는 자동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다.

선진제국의 축산업을 보면 그들조차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수출이 어려워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은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강한 거부반응이 있으므로 가격안정기금의 설치를 통한 지원방법이야말로 최선의 대안인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